다산포럼

정지창

금지곡의 시대

1970년대는 흔히 '유신시대'나 '긴급조치의 시대'로 규정된다. 가령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을 거부하여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던 금지와 처벌의 시대였다.

당시의 청년들은 산소가 부족한 고산지대의 등산객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분노와 한탄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탈출구는 술과 노래였다. 그러나 술자리도 야간 통금 때문에 밤 12시를 넘기면 안 되었고, 노래도 금지곡은 부르면 안 되었다.

심지어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도, 여자가 무릎 위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도 금지와 단속의 대상이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송창식이 부른 '고래사냥'의 첫 머리에는 이 시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가 녹아 있다.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애창되던 이 노래도 유언비어 유포를 엄벌에 처하는 1975년의 긴급조치 9호에 뒤이은 이른바 대마초 파동으로 금지된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실연의 아픔도 듣기에 따라서는 불신을 조장하는 불온한 선전선동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콧수염 가수의 원조인 이장희의 '그건 너'가 금지곡으로 찍힌 일이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라는 후렴구를 문제삼은 것이다. 중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시를 배우면서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탓에 검열관들은 노래가사 한 줄에서도 기어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직성이 풀렸던 모양이다.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 나는 이 노래가 다른 의미에서 혁명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우선 노랫말이 구어체의 일상어로 되어 있어 명쾌하고 솔직담백하다. 창법도 텁텁하고 직설적이어서 인위적인 꾸밈이나 치장이 배제돼 있다. 기타의 반주도 강렬한 호소력을 증가시킨다. 한마디로 민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이 노래가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평생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연예인들을 뒤를 쫓아 다니거나 좋아한다는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 양희은과 김민기를 좋아했지만, 노래를 즐겨 들었을 뿐, 요즘의 '광팬'처럼 열렬한 애정 표현은 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가수 이장희가 오랜 '미국 망명생활'(이라고 나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을 접고 울릉도에서 더덕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만간 울릉도를 그냥 가보고 싶어졌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거기 살고 있으므로.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나석주

들쭉날쭉한 정부평가

며칠 전 우리 지방공기업도 한해 농사를 결산하는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필자도 그날 나락을 야적하고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농부처럼 참담한 마음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는 평가발표에 앞서 우려했던 현상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초 경영평가라는 농사를 짓기 전부터 말썽은 시작됐다. 비유가 다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수매가를 담당한 사람부터가 '몇 마지기 농사밖에 짓지 않는 당신네가 지난해 최고의 수매가를 받은 것은 문제 있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방법은 정부의 의견을 들어 수년 동안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표를 협의 및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평가시행에 앞서 결산자료 제출까지 요구, 예상 계량점수까지 사전에 확인한 뒤 피 평가기관과의 협의과정 없이 지표를 일방적으로 바꿔버렸다. 이 과정에서 "평가지표의 불합리한 변경은 평가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들은 철저히 묵살되어졌다.

이는 시험문제가 출제되기도 전에 평가결과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도 소농인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밤낮없이 땀 흘려 노력한 결과, 올해도 고객만족도를 포함한 계량지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비계량 지표까지 포함한 전체평가에서는 결국 근소한 차이로 3위로 밀려나 버렸다. 평가 전문가들도 계량평가 1위 기관을 3위까지 밀어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년도 경영평가 지표 또한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짓는 기관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더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매년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와 용역기관 담당자들이 교체되면서 평가방법도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담당자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부재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대한 일관성까지 사라지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일부 특정기관에만 유·불리하게 적용되었다. 때문에 평가상의 문제점이 불거질수록 피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고 결국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올해 경영평가라는 시험은 이제 끝이 났다. 운동이나 시험에서 그 결과에 깨끗하게 수용하고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미덕인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출발점부터 불합리하고 결과마저도 이해하기 힘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평가를 둘러싼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거둔 결실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푸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부의 경영평가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피 평가기관들의 수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관계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일관성 있는 공명정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경영평가방식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전략기획실장〉

기고

이희현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맨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의 중요한 뿌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혁파하기 위해 온 국민이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광주학생운동 8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 보고 창조적 계승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유의미한 노력이 될 것이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경쟁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올바른 국제 관계 형성과 바람직한 문화 교류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광주학생운동의 의의는 일제의 변화된 식민지 지배 전략과 경제적 수탈에 저항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적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지배전략을 수정하였다.

문화정치는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단통치와 다를 바 없는 세련된 통치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욱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일제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쌀 수탈 등 경제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은 한 마디로 일제 문화통치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민족운동 세력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 힘입어 학생운동도 전국 단위로 퍼질 수 있었고 나아가 중국과 일본의 독립운동세력과 유학생들이 자주독립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광주학생운동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세계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다. 어느 나라가 무력이 강하다고 하여, 또는 경제력이 높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수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많은 국가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인류의 과제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우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문화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 문화를 소홀히 하고 '서양 모방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자연친화적인 삶의 태도, 상부상조와 같은 이웃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 등의 소중한 문화를 많이 잃어 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소중한 문화를 복원하여 전통 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하는 전통문화의 창달이 '문화 쇄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자유, 평등, 평화, 인권과 같은 현대의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도 소중하게 인정하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김구 선생은 '내가 바라는 나라'라는 글에서 부강한 나라 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원한다고 했다. 문화의 힘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모든 나라가 자국의 발전을 위해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인류 삶의 질은 되레 후퇴한다. 부강한 나라보다는 문화 창달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설월여고 2년〉

사설

농식품부 잇단 전남 발목잡기 의도 뭔가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전남도가 우주항공클러스터 부지로 요청한 나로우주센터 주변 고흥만 간척지 100만평에 대한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간척지 준공인가 이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불가'라는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 전남도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국가사업에 사용되는 부지일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농식품부는 고흥우주항공센터 부지 3만평과 활주로 부지 2만평을 고흥군에 양도·양수한 선례가 있다.

농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던 새만금 간척사업 역시 국가시책 변화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달리 대폭 수정됐다. 새만금 간척지는 참여정부 당시 전체의 70% 이상이 농업용지로 계획됐으나 관련 기관의 용역 결과 농업용지 비율이 30%로 축소되고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우주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전남뿐 아니라 인천과 전북, 대전 등 여타 시·도에서도 우주클러스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부지 확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파급력이 큰 우주산업육성은 타 시·도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도 농림식품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개발예정지구 중 한 곳인 송천지구에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해 성사단계에 접어들었던 대규모 외자유치사업에 차질을 가져온 바 있다. 중앙부처가 지자체가 애써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재를 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남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공직사회 비리 둔감증 질타한 朴 전남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뿔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이다. 박 지사가 정례조회시간에 전남도 공직사회의 부패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나섰다고 한다. 도지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직사회 비리를 작심한 듯 공개적으로, 그것도 장시간에 걸쳐 언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지사는 2일 11월 중 정례조회에서 "최근 발생한 공무원 비리 범죄를 보면 내가 얼굴을 들고다닐 수 없다"며 "동료의 부패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남도 공직자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평소 차분한 모습의 박 지사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까지 공직사회 내부의 '비리 둔감증'을 지적한 것은 공무원 부패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최근 감사관실 공직감찰 담당 사무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는가 하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한 검찰 기소율 순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단 전남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직사회 부패상은 '공직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어쩌면 지금까지 적발된 공무원 비리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지 모른다.

공직비리는 말만으로 척결할 수 없다. 허경만 전 지사도 공직부패의 온상인 건설비리 척결을 다짐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무원 비리를 감시·적발·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동료의 비리를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공직사회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필수 조건은 공직사회의 청렴이다. 부패 공무원 처벌 강화와 감사실의 역할 정비 등을 약속한 박 지사의 행보를 지켜볼 일이다.

無等鼓

역질(疫疾)

왕조시대에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전쟁이 맨 첫 손가락에 꼽혔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왕권과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은 동서를 가리지 않고 거의 일상적이었다. 전쟁이 터지면 왕족이나 귀족은 병사들에 의해 최후까지 보호됐지만, 평민들은 전장에 투입돼 적군의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처지가 대부분이었다.

전쟁 다음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전염병이었을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돌림병이 한 번 발생하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물론 전통의학을 중심으로 치료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의해 대규모로 옮겨지는 전염병에 대처하기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옛 문헌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문헌에서 '역질'(疫疾)은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역질은 얼굴에 곰보자국을 남기는 천연두를 포함한 전염병의 총칭(總稱)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었다. 소나 말, 염소 같은 큰 가축에서 닭, 오리 등 가금류까지 떼죽음을 당했고 민생은 피폐해졌다. 의학수준이 낮았던 시절 어쩌면 전쟁보다 돌림병이 훨씬 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조선시대에는 역질이 창궐하면 환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역병이 발생하면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추방했다. 환자에게는 음식물을 공급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역병은 귀신이 몰고 온다고 여겨 무당이 나서 역귀를 겁주어 쫓아내는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인 수단에 의해 전염병을 예방하기 시작한 것은 종두법 등이 도입된 근대에 이르러서다.

3일 정부가 신종플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고 위험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현대판 역질'인 플루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

음식점 '위생등급 의무표시제' 시행했으면

얼마 전 소비자들의 불만을 취재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다. 그 프로그램은 모 요리집을 주제로 방영했다. 평소에도 약간의 의심은 들었지만 그 TV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는 동안 배신감이 들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식용유는 거의 색이 새까맣게 된 것을 쓰고 있었다.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더러워서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용유를 오랫동안 쓰면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특히나 치킨집 같은데서는 오랫동안 사용한 기름으로 치킨을 튀길 경우 튀김닭의 색깔도 거무스레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건 아예 양념통닭으로 쓴다고도 했다. 일반 식당의 돈까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식당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음식업체의 위생을 행정기관 차원에서 좀 더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국민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다. 음식점이나 식품제조공장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할 수는 없을까.

합리적으로 위생등급을 매겨 업체마다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면 소비자들의 위생 걱정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자발적인 깨끗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다. 정말 요즘처럼 TV프로그램상의 음식점 고발프로를 보노라면 밖에서 식사할 생각이 싹 가신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1동

경찰력 낭비 부르는 무분별 가출신고 삼가야

요즘 가정에서 수개월이 지나도 찾지 않다가 이혼 목적으로 가정법원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가출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 또 남편의 가출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관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출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입장에는서 당연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경찰인력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가출인에 대해 재판상 이혼청구 방법은 사실 다른 방법이 있다. 이혼 목적 가출 신고는 경찰관서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나 통·반장 등 가출인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재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 주민센터에 가출인의 주민등록을 말소 후 공시 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기피하다가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가출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를 가져오고 다른데 써야 할 필요한 경찰력이 정작 엉뚱한데 소진되니 이런 행동은 삼가해 줘야 할 것이다.

▲지연자·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